

보도일시	2021. 12. 9(목) 배포 즉시 /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 김동현 사무관 남성욱	044-202-7554 044-202-755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22년 6월 중, 잠정)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배경>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을 추진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미국 '06년, 영국 '12년, 호주 '13년에 도입 (장기투자 적합펀드 등으로 구성),

-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상품도 가능. 펀드는 TDF(Target Date Fund), BF(Balanced Fund) 등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운용내용이 명시 되어야 함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①**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②**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①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총 6주 소요)**

*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운용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②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운용 가능(opt-in).**

○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opt-out)**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

○ 그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였다.

* 2020년 한해 동안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은 약 1조 700억원 수준

○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남성욱 사무관(☎044-202-75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운용상품 예시

1) 펀드(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사전지정운용방법(개정안 예시)

※ 펀드상품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시 ①TDF 혹은 ②BF가 반드시 하나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상품도 구성 가능

- ① **Target Date Fund(TDF):**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법
- ② **Balanced Fund(BF):** 채권, 주식 등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 시장 전망 및 펀드 내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방법
- ③ **Stable Value Fund(SVF):**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등에 투자하여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
- ④ **SOC Fun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사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운용방법
-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방법

2)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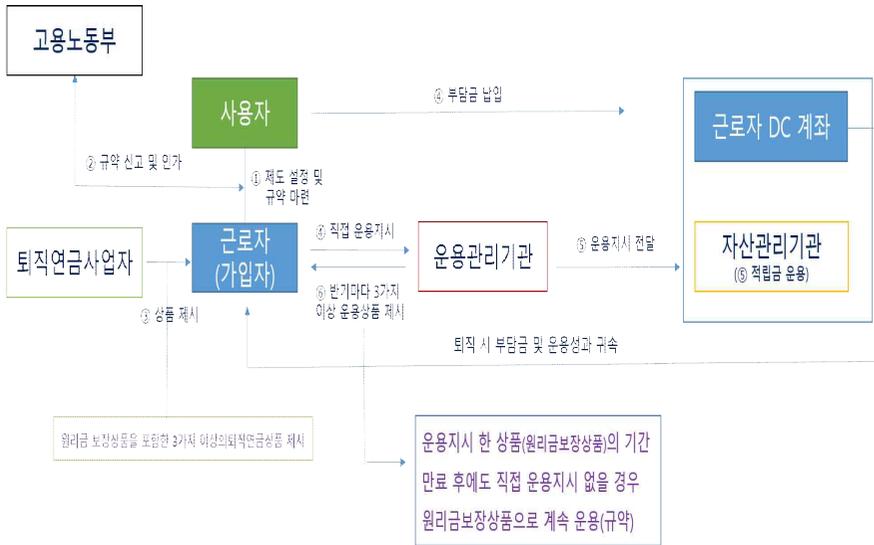
- ① **예·적금(은행):**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
- ② **최저이율보증보험(보험사, GIC):**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예금과 실질은 유사하나 형식은 보험계약 형태
- ③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증권사, ELB: Equity Linked Bond):** 기초자산(코스피 등 특정 지수, 00전자와 같은 특정 주식 등)의 변동성에 수익률을 연계한 채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수익률도 약정에 따라 변동되나, 원금은 보장되는 형태의 채권

붙임2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운영 절차

개정안	
제도 설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을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관련 사항을 규약에 반영(법 시행 후 1년 이내 반영)
↓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및 규약 반영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1)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 TDF, BF 등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을 노동부에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 금지, 우량상품 승인 취지에서 요건을 마련 :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2)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게 설명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복수가능)을 규약에 반영 3)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노동부에 신고
↓	
상품 제시 (제21조의3 제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한 정보 (운용구조 및 손실가능성 포함)를 가입자에게 제공 -
↓	
근로자 운용지시 (제21조의3 제2항)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중 근로자가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사전지정, 근로자 직접 운용 지시
↓	
운용방법 기간만료 (제21조의3 제3항)	1) 상품의 운용기간 만료 후 4주 동안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통지* * 사전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운용구조, 손실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2) 통지 후에도 2주동안 운용지시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운용지시변경 (제21조의3 제4항)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원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 가능(OPT-OUT)
↓	
수수료 (제21조의2 제1항, 제29조의2)	1)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관리 2) 가입자 이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전반의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비용과 운용수익등이 반영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
↓	
사후관리 (제21조의3 제6항)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후에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승인취소 등의 사후관리

< 현행 DC제도 운용방법 >



<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 절차 >

